68. [경제칼럼] 부실산업 구조조정 제대로 이뤄지려면

총선 기간 중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으로 촉발된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만 활발하다. 구조조정의 주체도 불명확하고 더구나 부실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자금 조달 방법 논의만 한창이다. 발권력을 동원한 구제금융을 양적완화라고 표현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이젠 ‘한국은행이 융자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출자를 해야 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한은이 대립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신속, 과감 그리고 확실한 책임 추궁이란 세 박자를 최소한 구비해야 한다. 현실이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면 구조조정은 시늉만 내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부실을 내버려두면 점점 더 악화된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 이미 부실화됐다고 판정받은 기업이 회생하려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실 규모를 능가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 발생한 부실뿐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부실까지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부실이 확실하게 제거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다. 현재 부실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없고 더구나 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면 신속과는 거리가 멀다.   
  
구조조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따라서 갈등 여지도 많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갈등이 적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호미로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소마스크로 연명시켜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오직 경기만 살아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바지에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이제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이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천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좋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경제장관회의가 구조조정의 중심기구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구조조정의 선봉에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 논의만 무성하고 행동은 없다. 관료들의 몸 사리기가 만연하는 한 과감한 조치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구조조정에는 책임 추궁이 빠질 수 없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부실에서도 봤듯 부실이 발생하면 그저 그뿐인 경우가 많았다. 경영 전략적인 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경영 판단이라는 핑계로 그릇된 결정을 하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상선과 같이 대주주의 판단 잘못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면 최소한 대주주 주식은 완전 소각해야 한다. 대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것은 소액주주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에 경영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손실이 났을 때 소액주주에 비해 더 많은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이 소액주주와 같은 비율로 감자되고 설사 높은 감자 비율이 적용돼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한다. 이는 확실한 책임 추궁이 아니다. 더구나 채권의 주식 전환으로 부채가 줄어들어 주가가 오르는 혜택을 대주주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대주주 주식은 완전 소각해야 한다.  
  
매번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2만달러라는 박스에 갇혀 3만달러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종국에는 시장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이 정착돼야 한다. 기업의 성과와 장래 전망은 주가에 반영되고 시장은 이를 통해 기업을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